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3월 4일 금요일 (음 1월 26일) 제151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통합된 도체육회 창립총회 3일 전북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존 양 단체의 대의원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된 '전북도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총회에서는 회장 추대, 전북도체육회 정관 승인, 임원 구성(안)에 대해 의결을 했다. 초대회장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추대 되었으며, 총 10장 57개조로 구성 된 정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또한 임원 구성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했다.

"새학기가 되면 설렘보다 부담먼저"

Report 학교 촌지 · 찬조금 여전

도내 2012년부터 7건 발생 징계는 '솜방망이' 그쳐

도교육청 "불법행위시 신고센터로 신고해야"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은 설렘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달이 아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학교 '촌지'와 '불법찬조금' 등의 악습이 새학기를 맞이하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기 때문이다.

올해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최모씨(33)씨도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담임선생님도 만나야 하고 학교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할 것 같아 학교를 찾지만 촌지와 찬조금 등의 문제 때문에 고민스럽다.

최씨는 "아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운영위원을 맡을 계획이다. 아이를 둔 선후배 얘기를 들으면 운영위원을 하면 1년에 최소한 몇백만원은 깨진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요즘은 교육청 감사 때문에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안 받는다고는 하는데 정말 안 받는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은 지난 2012년 기준 3년 동안 7건이 발생, 서울(50건)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높게 나타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도 했다.

당시 지역별로는 서울(50건), 경기(46건), 부산(19건), 강원(12건), 충남(8건), 전북(7건) 등으로 불법찬조금, 촌지 민원이 접수됐었다.

반면에 전북의 경우, 견책 5명(3명 소청(불문 경고), 정직 3개월(소청 기각) 1명, 정직 1개월 1명, 감봉 3개월 1명 등 대부분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촌지와 불법 찬조금 등 학교 현장의 뿌리 깊은 폐습이 근절되지 않는 한 개학 때마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부담도 여전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에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을 모금하는 등 불법 찬조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학부모 모금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임의적 운영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 명목의 모금 등이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을 비롯해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는 촌지 및 금품수수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 등 수익자부담 경비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집행내역은 학부모와 교원등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고민형 기자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하향

연 27.9%로… 그 이상 대출해주는 저축은행까지 '직격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물론이고 저축은행들까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현재 27개 저축은행이 연 27.9%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어 당장 이달부터 신규 대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34개의 저축은행 가운데 7개 업체를 뺀 27개 저축은행이 인하된 최고금리인 27.9% 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단순 수치상 27개 저축은행에서 27.9%이상 금리로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비중은 평균은 67.1%에 이른다.

동원제일저축은행은 27.9% 이하 금리로 고객을 취급하지 않았다. OSB저축은행과 조은저축은행은 인하된 최고금리 이상의 고객 비중이 각각 97.97%와 96.34%에 달했다.

대형저축은행 역시 절반 이상이 27.9%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그 비율을 보면 ▲JT저축은행 92.76% ▲OK저축은행 82.91% ▲웰컴저축은행 71.31% ▲HK저축은행 64.53% ▲SBI저축은행 50.59% ▲JT친애저축은행 49.30% 등이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신규대출 영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 현행 34.9%보다 7%p 낮은 금리로 진행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 출신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업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고금리 이용고객이 많은 것"이라며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고객 신용평가나 상품금리 책정이 모두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며 "우선 보수적인 심사로 위험을 최소하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경우 정말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금리를 낮춘 만큼 광고 규제를 풀어주는 등 제재 해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7.9% 이내의 금리만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IBK저축은행 ▲KB저축은행 ▲대아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오성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참저축은행 등 7곳이다. /안진수 기자

"통과된 테러방지법 태어나면 안될 괴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회장 한택근)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헌법소원 등 폐지운동에 나섰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라는 성명을 내고 "테러방지법안은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것"이라며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적법절차원칙 · 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며 "법안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 · 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변, 헌법소원 등 폐지운동 "모든 수단 · 방법 동원할 것"

그러면서 "정의화 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민변은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재석 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정부 · 여당의 중점 법안인 테러방지법은 192시간에 걸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주 기자

▶ 매일 INDEX

5면 드론 안전성 검증시범사업 첫 비행개시

전주시가 항공공학과 IT기술이 융합된 드론의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본격화했다.